



보도시점 2024. 4. 18.(목) 배포 2024. 4. 18.(목)

## 재외동포청, 올해 재외동포정책 시행계획 안건 심의 -5대 정책목표 89개 세부과제...18일 재외동포정책실무위 열어 논의

-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은 18일 정부 서울청사 별관 17층에서 제33차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 회의를 열어 2024년 재외동포정책을 뒷받침할 시행계획 안건을 심의했다.
- 실무위원회는 재외동포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위원장 외교부장관)에 상정할 안건을 심의하는 회의체로, 지난해 신규 제정된 ‘재외동포기본법’에 따라 위원장은 재외동포청장이 맡고 있다.
- 이날 회의에는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정부 위원과 13명의 민간위원이 참석했다.
- 이기철 청장은 회의에서 “기본계획에 따라 최초로 성안되는 올해 시행계획은 향후 마련되는 연도별 시행계획의 기준점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평가하면서 “재외동포청 개청 1주년이 다가오는 만큼 재외동포의 높은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행계획에 따른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특히 이 청장은 “재외동포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외국 교과서내 한국의 정치·경제 발전상 수록 사업은 ①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과 함께 ② 거주국내 지위향상이라는 재외동포정책 핵심목표 2개를 동시에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③ 한류문화 확산 기여 그리고 ④ 자체적인 브랜드가 부족한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1석 4조의 핵심적인 사업이다”라고 강조했다.

□ 이날 단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4년 재외동포정책 시행계획’은 지난 1월 확정된 5개년 중장기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2024~2028년)에 따라 마련됐다. 정부는 기본계획의 구체적인 실행과 이행력 제고를 위해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의 5대 정책목표(▲재외동포정책 강화체계 확립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국격에 걸맞는 동포 보호·지원 강화 ▲한인 네트워크 구축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기여)에 맞춰 총 17개 중앙행정기관의 89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 특히,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과 거주국 지위향상을 위해 한국 정치·경제 발전상 알리기 등에 집중 투자하고, 국내동포 증가에 대응한 종합적 지원 시스템 구축과 재외동포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또한 올해는 동포사회와 연계해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청년 일자리 지원 등 범 정부 차원의 민생경제 회복 노력에 부응하고 따뜻하게 보듬는 민생우선 정책 시현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 재외동포청 출범에 따른 동포사회 기대에 부응해 관련 정책 콘텐츠를 마련하고 정부간 협업 등을 통해 속도감 있게 가시적인 성과 달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 이번 재외동포실무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한 시행계획은 추후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 재외동포청은 전세계 재외동포의 든든한 울타리이자, 재외동포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재외동포 사회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끝.

담당 부서	재외동포청	책임자	과장	곽삼주	032-585-3154
	재외동포정책과	담당자	외무사무관	이상급	032-585-3157